

## 정당한 전쟁론 연구 - 평화주의, 현실주의와의 비교 -\*

박원근\*\*

### 논문초록

고대로부터 시작된 전쟁에 대한 기독교 성찰은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론으로 나뉘어 지금까지 지도 지속되고 있다. 두 관점 모두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반면 현재 국제정치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군림하고 있는 신현실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전쟁을 정치의 연속으로 간주한다. 전쟁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정전론에 주목한다.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와 윤리·도덕적 고려를 배제하는 신현실주의와는 달리 정전론은 침략에 대항해서 싸우는 자기 방어의 정당성을 보편적인 규범이자 평화를 회복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침략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을 정의를 세우는 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정전론은 전쟁 수행의 정당성과 전쟁 개시의 정당성 두 분야로 구분하여 원칙을 제시하므로 부당한 전쟁을 고발하고 정당한 전쟁의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각각의 원칙에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선제공격, 예방전쟁과 같이 연계된 주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정전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정전론이 제시하는 원칙과 규범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활용한다면 전쟁과 평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독교 국제정치학자의 책무이기도 하다.

주제어 : 정당한 전쟁론, 평화주의,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전쟁

---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한동글로벌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교수

2016년 4월 30일 접수, 5월 30일 최종수정, 6월 1일 게재확정

## 1. 서론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 창조, 타락, 구속을 다 이루셨지만(요한복음 19: 30), 안 믿는 자들의 죄성과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일부 믿는 자들의 행태가 복합되어 인간 세상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지속된다.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결로 이곳 한반도에서도 6.25전쟁을 겪었고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일부 국제정치 학자들은 자유 민주주의 승리와 함께 보다 평화로운 세상의 도래를 예상하였지만(Fukuyama, 1992),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은 만 5년이 지난 지금 최대 47만 명으로 추산되는 희생자를 내고(New York Times, 2016) 5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전 유럽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슬람 국가(IS)라는 국가 형태의 테러조직을 탄생시켰지만, 해결의 조짐은 요원하다. 한반도도 2011년 12월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로 등극한 후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전쟁 불사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중앙일보, 2016).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전쟁에 대한 기독교 성찰을 이어가는 노력은 기독교 국제정치학자의 의무이다. 국제정치학은 1차 세계 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후 1919년 영국의 웨일스 대학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자는 목적을 갖고 태동되었다. 그러나 100년 가까이 된 현 시점에서 국제정치학은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낮아 되는”(이사야 2:4)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제정치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 성찰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문제를 논하는 초기의 시도는 기독교 사상가에 의해 출발하였지만, 20세기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전쟁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시도는 제한되기 시작하여 주류에서 밀려나 일부 기독교 국제정치학과 정치철학자, 신학자에 의해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제정치 논의에서 기독교 성찰을 담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 노력은 더욱 제한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도 신앙을 바탕으로 한 윤리·도덕적 고려를 배제한 국제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신현실주의에 따라 생존과 국가 이익, 권력 등을 핵심 변수로 상정하여 선제공격의 요소를 포함한 작전계획 5015, 북한의 국지 도발시 비례성을 넘어선 반격을 가하는 한국의 능동적 억제 전략,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한 예방전쟁, 이른 바 “공포의 균형”을 보다 실제화하기 위한 한국의 핵무장 등

의 전략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시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주제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우선 전쟁에 대한 기독교 성찰을 포함한 기존 논의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서구의 신앙과 철학에서 파생된 정당(正當)한 전쟁 전통(정전론, 正戰論, just war tradition)이다. 정전론은 현실의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하여 신앙적, 도덕·윤리적, 또는 법률적인 기준과 판단체계를 접목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국제정치, 신학, 철학의 한 조류이다. 본 논문은 정전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학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 차원에서 전쟁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전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전쟁 개시의 정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쟁 발발시 수행의 원칙을 엄격히 규정하여 확전을 막는 정전론을 분석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한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전론의 기원과 논의과정, 성경적 토대를 포함한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후 기독교의 전통에서 제시되는 또 다른 전쟁에 대한 해석과 대안인 평화주의와 현대 국제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정전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전론이 제시하는 원칙과 조건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견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후 정전론이 보강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정치 학문 분야에서 기독교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 II. 정전론 개관

### 1. 정전론의 기원과 논의 과정

정전론은 전쟁 자체를 옹호하는 논의가 아닌 전쟁을 막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전론은 범주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개시되고 수행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전론의 기원은 기독교 성찰로 시작되었다. 기본적인 전제는 정의 없이는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여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전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엄격한 기준

과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전론이 제시되게 된 또 다른 동기는 인간 세상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전론에 대한 기독교성 성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사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인류 사회의 파괴와 갈등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고대와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프란시스코 드 비토리아, 그로티우스 등이 정전론을 제시하였다. 현대로 와서는 폴 램지, 제임스 터너 존스, 마이클 월저, 엘쉬타인, 데이비드 로딘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정당한 전쟁의 기원은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로 시작되지만, 논의를 보다 구체화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전론을 두 가지 신념을 기반으로 발전시켰다. 첫째, 이기적인 이유에 의한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공격자를 살해하는 것도 이기적 동기로 부당한 것이다. 둘째, 이웃을 돕는 것은 의무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칼과 전쟁이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신원하, 2003: 138-139). 이를 위해 최초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전쟁의 “정당한 명분의 원칙”과 “적절한 권한의 원칙”을 정당한 전쟁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였다(Fotion, 2000: 68). 구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 반드시 적합한 권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부당한 침략자에 대응하는 것에 한정되고 보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패배자와 포로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제시하였다(Allen, 2014: 24).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사상과 아우구스티누스에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보다는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 전쟁론을 전개했다. 사회의 공공선을 세우는 것을 정당 전쟁론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을 응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부나 위정자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신원하, 2003: 139). 아퀴나스는 이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전쟁은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둘째, 전쟁은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전국은 평화추구와 악의 회피라는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Heywood, 2011: 265). 권위를 가진 위정자나 정부가 정당한 의도인 공의를 세우기 위해 전쟁을 수행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정당 전쟁론이 제시하는 두 가지 원칙인 “전쟁 개시의 정당성”(jus

*ad bellum, justice of war*)과 “전쟁 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 justice in war) 중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전자의 논의에 기여하였다. 로마 카톨릭은 19세기에 아퀴나스의 저서를 카톨릭 이론의 기초로 인정하여 정당 전쟁론의 기본 입장을 수용하였고, 개신교도 루터와 칼빈이 정전론을 수용하므로써 주류 개신교단의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루터와 칼빈은 지도자가 군사적 행위를 포함한 무력 사용의 권리를 갖는다는 입장을 보였다(Holmes, 2005: 3).

정전론의 기독교 전통과 함께 자연법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정당한 전쟁을 평가하는 시도도 지속되었다. 자연법 전통은 16세기 프란시스코 드 빅토리아에 의해 발전되었고, 이후 그로티우스에 의해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이 전파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전쟁을 제한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로코드 지배와 반란에 대한 정치 이론을 제시하는 등 법치가 폭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Holmes, 2005: 2). 특히 빅토리아는 전쟁 수행의 정당성에 천착하여 비례성과 차별성의 원칙을 발전시켰다. 이후 정전론이 제시하는 원칙은 제네바와 헤이그 협약, 유엔 헌장 등 다양한 국제 조약에 포함되었다(Patterson, 2007: 7).

현대로 오면서 기독교 전통의 정전론은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이 강화되었다. 현대 정전론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우선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이 혼합된 것으로 전제하고 악의 측면이 드러날 경우 다른 이들을 살해하는 전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또 다른 전제는 불가피한 전쟁에 윤리적 제한을 가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정당한 전쟁의 원칙과 전쟁법규가 수립되어 국가 지도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전쟁의 숫자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Heywood, 2011: 266).

현대 정전론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핵무기가 사용되면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후술할 현실주의의 지배적인 등장으로 인하여 위축되었다. 그러나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쟁과 연계되어 다시금 정전론이 대두되었다. 일차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주창한 전략방위구상(Security Defense Initiative: SDI)이 기존 핵억제론과 충돌하면서 정당성 여부가 제기되었다. 이후 2000년대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수행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다시 한 번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 2. 정전론의 성경적 토대

정전론의 신학적 토대는 초대 교회에서 전쟁과 군복무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시작된다. 이교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용기와 명예가 아닌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은 용기와 명예와는 달리 적에 대해서도 공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플라톤과 키케로가 전쟁과 무력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주창했지만, 기독교 사랑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기독교의 사랑은 무력 불사용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폭력에 대한 무저항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 통치 시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군 복무를 거부하고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기독교인의 종교적 의무를 세속의 정치·군사적 직분과 구분하는 “두 개의 소명 독트린”(a doctrine of two vocations)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교회가 세속 정부의 도덕적 자기 방어 권리와 기독교인의 군 복무를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다. 특히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와 정부와의 관계가 보다 복잡해졌다. 어거스틴은 두 개의 소명 독트린을 “두 개의 왕국 독트린”으로 전환하고 기독교인의 정부 참여를 통한 두 개의 시민권을 정당화하였다. 이를 전제로 정부는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무력 사용의 권리를 갖는다고 최종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당한 전쟁이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됨을 표방하였다(Holmes, 2005: 35-36).

어거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루터와 칼빈도 “두 왕국” 또는 “두 영역”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차이가 있었다. 루터는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 수동적인 반면 칼빈은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칼빈은 세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으므로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따라서 완전한 국가의 중립 또는 분리는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손봉호, 2016: 4-5). 정전론을 발전시킨 기독교 사상가들은 세상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전론의 전통은 다음과 같은 전쟁과 관련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주창된다. 첫째, 전쟁은 인류 역사에 비극적 사실로 남아 있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전쟁, 신약 성경에 제시한 전쟁에 대한 예언(마태 24: 6-8, 이사야 11, 요한계시록 19, 20)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지선의 가치임에도 전쟁 발생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국가 또는 세계 차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의로운 평화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전쟁과 폭력에 대해 애통하는 모습(역대기 22: 7-10, 시편 46: 8-11, 시편 120), 구세주 도래에 대한 희망(이사야 2:1-5, 9:1-7, 11:1-9), 전쟁의 난폭성과 과도한 폭력에 대한 정죄(신명기 20:10-20, 아모스 1),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구약에 나타난 모든 도의의 최종적인 정리(마태 5:9, 마태 21-26, 로마서 13: 8-10) 등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결국 세상을 구원하였으므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Holmes, 2005: 6). 셋째, 정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성경은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정당한 정부의 사형을 비롯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신약도 사랑의 법칙 범주에서 이를 수용한다. 칼빈도 이러한 해석을 이어 받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로마서 13:1)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로마서 13: 4)는 말씀을 근거로 국가가 공격을 받아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면 정부는 악을 제어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해석한다. 10계명 중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출애굽기 20: 13)는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살인, 복수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신원하, 2003: 141).

현대 기독교 정전론자인 램지도 위의 주장에 동의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므로 이웃이 침략자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은 희생자와 침략자를 구분하여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특히 램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하는 있는 상황에 예수님에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만약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모른 척해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따라서 사랑은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고통 받는 자들을 억압자로부터 구해내야 한다(Ramsey, 1968: 142-143).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성경 해석이 평화주의자와의 차이이다. 정전론자와 평화주의자 모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지만, 전자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부당한 공격을 받는 희생자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반면 평화주의자는 어떤 형태의 무력 사용에도 반대한다. 따라서 정전론자는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전론의 결론은 이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한 전쟁이 더 많으며 정전론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범주와 원칙을 준수할 경우만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3. 정전론의 주요 내용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제시된 정전론의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쟁 개시의 정당성(*jus ad bellum*)과 전쟁 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에 대한 논의로 나뉘어 지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쟁 개시와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상호 보완적이다. 전쟁자체의 정당성 없이 수단만 정당하다고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없고, 역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쟁 중 모든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

전쟁 개시의 정당성( <i>jus ad bellum</i> )	
기준	설명
정당한 이유	• 자기방어 또는 제3국 방어, 인도주의적 개입
정의로운 의도	• 팽창, 영광, 약탈 등이 아닌 불의와 공세에 대응하는 목적
정통성 있는 권위	• 주권 국가
최후의 수단	• 모든 비폭력적 노력이 실패한 후 사용
승리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	• 승리의 가능성이 낮은 전쟁은 수행 불가
평화의 회복	• 전쟁 목표가 이전 상태 또는 평화 회복
수단과 목표의 비례성	• 전쟁은 악보다는 선으로 종결 • 국가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최소의 무력만 사용 • 적군과 민간인에 대한 완전한 궤멸 불가
전쟁 수행의 정당성( <i>jus in bello</i> )	
기준	설명
수단의 비례성	• 국가는 최소한 또는 비례성에 따른 무력 행사 • 적국의 완전한 궤멸 불가 • 재래식 공격에 대해 핵으로 대응 불가
민간인 공격 배제	• 민간인, 군 시설과 직접 연계 없는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배제

출처: Allen (2014: 27-38), Shapcott (2011: 205), Heywood (2011: 267), Holmes (2005: 4-5), 박정순(2006: 135-150) 등을 종합하여 작성

#### 〈표〉 정당한 전쟁의 원칙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전쟁 자체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의 이유와 의도 등을 핵심적 논의로 삼는다. 전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아국의 전쟁 이유는 분명하게 정당해야 하는 반면 상대편은 부당해야 한다(Sider, 2012: 166).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당한 이유는 침략으로부터의 방어이다. 타국이 공격했을 때 방어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로 언급되는 상황은 침략으로 강탈된 영토의 회복, 방어를 돕기 위한 개입,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 등이다. 정의로운 의도는 동기와 목표가 합당해야 전쟁이 정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쟁의 목적이 팽창, 영광, 약탈, 말살 등이 아닌 불의와 공세에 대응하여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정통성 있는 권위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제외하고 주권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전쟁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최후의 수단은 전쟁을 예외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예를 들면 외교적 협상, 제재 등의 방법을 모두 시도하였지만, 실패할 경우 앞선 이유와 의도에 부합하다면 예외적으로 전쟁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승리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은 전쟁의 이유와 의도가 전쟁을 유발한 평화 훼손 행위를 원상 복귀하는 것이므로 이를 성취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전쟁 승리 가능성이 없으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Long, 1968: 28). 마지막으로 수단과 목표의 비례성은 전쟁은 악보다 선으로 종결되어야 하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의 무력만 사용해야 한다.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비용과 손실이 전쟁의 이득과 보상에 균형적인 비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민간인과 적군에 대한 완전한 궤멸을 시도하는 것은 비례성을 위반한다(Shapcott, 2011: 205; Heywood, 2011: 267; Homes, 2005: 4; 박정순, 2006: 135-136).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전쟁 중에 취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 구체적으로 전쟁 시 국가 또는 군인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과 규약을 포함한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민간인 공격 불가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정전론은 응집성을 상실하게 된다. 비전투원과 일반 시민, 군 시설과 관련 없는 민간 시설 등이 공격의 직접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 이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차별성의 원칙 또는 비전투원의 면책성으로도 표현된다. 또 다른 핵심 원칙은 수단의 비례성이다. 전쟁 개시의 정당성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국가는 평화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Shapcott, 2011: 205; Heywood, 2011: 267; Homes, 2005: 4; 박정순, 2006: 143).

### III. 정전론에 대한 도전

#### 1. 평화주의와 현실주의의 전쟁관

정전론이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쳤고 성경적 토대가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기독교의 전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전통인 평화주의는 어떠한 종류의 전쟁도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sup>1)</sup> 교회는 4세기 전반까지 정전론 보다는 평화주의를 받아들였고, 20세기 후반 존 하워드 요더와 스탠리 하우어워스 등에 의해 정교화되어 주류 교단과 신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평화주의는 예수님의 사랑, 평화, 용서, 섬김을 강조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불의에 대해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악한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마가 5:39),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가 26:52)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폭력에 반대한 것을 넘어서 희생적인 이웃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가르치셨다(마태 22:39, 마태 5:43, 마태 19:19, 마가 12:31, 누가 10:27, 마가 12:33).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부활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불의에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셨으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무력 사용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역사를 맡기고 무저항과 복종을 통한 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신원하, 2003:

---

1) 평화주의에도 “기술발전론적 평화주의, 핵위협 평화주의, 환경론적 평화주의, 실용적 평화주의”(박정순, 2006: 162)와 “선택적 평화주의” 등이 있지만, 이들 평화주의는 일부 전쟁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므로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원칙을 갖고 판단하는 정당 전쟁론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알렌(Allen, 2014: 12)의 주장에 동의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쟁의 부당성을 전제로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절대 평화주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136-138; 조동준, 2015: 13; Yoder, 1971; Regan, 2013: 4-5).

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초기 기독교는 적어도 4세기 전반까지 박해에 무저항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2:4, 미가3:4)는 말씀에 나타난 예언이 예수님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으로 완성되었다고 전파했다(Sider, 2012: 159). 베인톤(Bainton, 1960: 53)의 연구에 따르면 4세기 초까지 기독교인의 전쟁 참여를 찬성하는 문건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다르다는 이원론적 믿음에 따라 자연영역에 속한 국가의 독자적 권위를 인정하여 박해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평화주의를 견지하였다(손봉호, 2016: 4).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화된 주후 313년 기독교인은 기독교 황제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불가피한 특정한 제한된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정당 전쟁론을 수용한다. 이에 따라 평화주의는 힘을 잃고 수도원 운동과 같은 소수에 의해서 주창되다가 종교 개혁 시기 다시금 부상하였다. 재세례파(Anabaptist)와 같은 소종파에서 시작되어 후에 메노나이트 교단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야하며, 그 길은 무저항, 비폭력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윤리라고 믿었다. 따라서 세상의 제도와 원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인 평화를 지키고자 하였다. 재세례파 외에도 웨이커교도와 기독교형제단 등도 평화주의 전통 아래 국가가 주도하는 전쟁에 반대하며 무력대응 보다는 무저항 인내를 주창한다(Regan, 2013: 5; 박도현, 2010: 39-43; Childress, 1986: 446-448).

현대 평화주의에 대해 알렌(Allen, 2016: 13-15)은 실용주의 주장(pragmatic argument)과 증인 주장(witnessing argument)으로 나누어 설명을 시도하였다. 실용주의 주장은 비폭력적 방법이 전쟁보다 세상에서 불의에 저항하는데 더욱 효과적 방법으로 본다. 비폭력은 폭력을 사용하려는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종의 "도덕적 유도(柔道)"로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등에 의해 실천되어 작동했다. 비폭력을 주창하는 이들은 도덕적 주도권을 갖고, 폭력주의 적대세력이 상상치도 못하는 비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냉정과 절제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므로 오히려 월등한 힘을 갖는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국제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비폭력은 "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체제"가 된다(Gregg, 1966: 36-41, 44, 46-71, 51). 따라서 실용주의 평화주의자들은 비폭력이 "항상" 전쟁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증인 주장은 비폭력이 가져오는

결과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전쟁은 기독교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배격해야 한다는 보다 근원적 원인에 기인한다. 20세기 기독교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요더는 실용주의 주장을 배격한다. 요더는 그리스도인이면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폭력과 순종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예수의 제자로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은 폭력에 반대하며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폭력적인 정치체제에 협력하지 말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Yoder, 1977). 또 다른 평화주의자인 하우어워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폭력과 강압에도 반대하였으므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Hauerwas, 1985, 1988).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현대 평화주의는 카톨릭에 의해 주도되었다. 핵무기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핵전쟁을 반대하였고, 일부 개신교단, 예를 들면 감리교 주교단과 함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전면전, 선제공격, 군비경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조동준, 2015: 15).

현실주의는 고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로 시작하여 16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마키아벨리에 의해 기초 사상이 정립되었고(Machiavelli, 1988), 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에 의해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으로 상징화되었다(Hobbes, 2013). 또한 현실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칼 클라우즈제비츠(Karl von Clausewitz, 1780-1831)는 “전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이자 정책의 도구”라는 유명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Clausewitz, 1976).

현실주의는 근대 민족국가의 태동과 함께 정당 전쟁론의 전통을 빠르게 대체하였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 민족국가는 전쟁을 국가의 이성(raison d'état)에 따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고 도덕적·윤리적 고려를 배제한 군주의 판단을 당연시하였다(박준성, 2006: 114). 그러나 1차 세계 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후 국제사회는 다시금 평화에 대한 논의와 여러 방책을 시도하였지만, 2차 세계 대전을 막지 못하고 연이은 냉전으로 인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배제하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현실주의가 득세한 후 신현실주의로 발전하여 21세기 현재 국제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기능하고 있다.<sup>2)</sup>

2) 현실주의와 함께 국제정치의 또 다른 주요 패러다임으로 기능하는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경우 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의 경우 인간 세상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

현실주의에는 고전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신고전현실주의의 다양한 분파가 있어 하나의 통합된 주장으로 정리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쟁과 평화를 윤리적 측면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국가이익의 추구에 의해 결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또한 이 관점은 인간의 끝없는 권력 추구를 본성으로 보거나, 국제정치의 구조에서 국가 간의 상대적 이득 추구를 보편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부연하면 현실주의는 전쟁을 힘의 추구 또는 자기이익의 추구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전쟁을 인간 역사의 보편적 규범으로 정의한다(Heywood, 2011: 264-265; Dunne and Schmidt, 2014: 103-104).

고전현실주의와 신고전현실주의가 공유하는 세계관은 인간의 이기성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경쟁을 통해 남을 지배하는 권력 추구욕이 있으므로 이러한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 간 관계에서 도덕이 작용할 수 없다(Rathbun, 2012: 611). 정당한 전쟁 전통을 반대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발전시킨 고전현실주의자는 기독교 사상가인 라인홀드 니이버이다. 니이버는 자연법의 이성과 법에 대한 강조를 죄성 가득 찬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통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낙관주의로 간주한다. 또한 자연법에서 파생된 특정한 도덕규범이 충분한 보편성을 갖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정의와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이상주의적이라 비판한다. 따라서 무력은 권력의 수단으로서 정의와 사랑과 같은 추상적 개념 보다는 무정부 상태를 피하고, 실제 준동하는 악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Niebuhr, 2013).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현실주의는 국가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최종 정치적 권위를 가진 주권체로 정의한다. 국가 보다 상위의 어떤 집합체도 존재하지 않고 국가만이 정

---

하여 제도와 법 등을 매개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여 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성주의는 전쟁의 원인을 행위자간 관념 혹은 행위자와 구조간의 상호인식(간주관성) 차원에서 분석한다. 부연하면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에서 윤리와 도덕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고, 구성주의는 관념의 변화와 기존 구조와 행위자간의 역할 조정을 통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주의는 평화주의와 정전론의 전제인 윤리와 도덕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반면 구성주의는 상대성과 상호성을 강조하므로 전쟁과 평화 전체를 품는 일관된 주장을 찾기가 힘들다. 역사적 시대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평화주의와 정전론의 주장과 보다 명확히 대별되는 윤리·도덕적 판단 배제와 생존과 안보를 위한 세력의 확장을 위해 전쟁도 가능하다는 전제와 인식, 논리를 펼치는 현실주의를 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통성을 갖고 독점적 무력을 행사한다. 세계 정부가 없는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다. 이런 세상에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생존이고 이를 위해 정치 지도자는 강력한 군사력과 이합 집산하는 동맹 등을 통해 자조(self-help)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서는 도덕·윤리적 고려가 끼어 들 틈이 없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포함한 국가의 결정이 국익에 기여하는 지 여부이다. 인간의 일상에 적용되는 개별 도덕과 국가의 이성에 적용되는 도덕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른 바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책임진 국가 지도자는 개별 도덕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이면 도덕·윤리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Kegley and Blanton, 2015: 24-26).

위와 같은 전제와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실주의는 신현실주의로 발전한다. 키네스 월츠가 토대를 마련한 신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 선과 악, 도덕과 윤리와 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이론화를 위해 국제정치의 구조에 천착한다. 모든 국가는 무정부 상태의 세상에서 자조를 추구하므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안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을 피하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정치는 국가간 혹은 국가군간의 세력균형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월츠는 세력균형을 국제 정치의 자연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상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Waltz, 1979, 2013).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규범적 목적을 갖고 설립된 국제정치학은 월츠 이후 이론화·과학화를 목표로 객관적 현상 파악을 통한 이론 창출을 추구한다. 어떤 상황에서 국제 구조가 변화되는지, 변화하는 국제 구조에서 세력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변수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특히 현 미국의 주류 국제정치학은 “월츠에 대한 주석”이라는 자조적 고백과 함께 윤리와 도덕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배제한 실증주의에 기반한 이론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이근욱, 2009: 13).

## 2. 평화주의와 현실주의의 문제점

전쟁을 금하는 평화주의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평화주의가 제시하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주변국을 침략하는 국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유일한 대응 방안이 전쟁인 경우가 많다.

라인홀드 니어버는 평화주의의 실용주의 주장에 대해 반대 논리를 전개한다. 우선 실용주의 평화주의자들은 인간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비폭력이 효과적이라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선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평화를 외치더라도 침략자의 야심을 막을 수 없으므로 평화주의는 지나친 낙관론을 펼친다는 것이다. 또한 니어버는 평화주의의 실용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폭정국가를 도덕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도출한다고 비판한다. 무력사용의 위협을 가하는 폭정국가에 대해 전쟁이 부당하므로 비폭력으로 대항한다면 폭정국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내부적 억압은 물론 기회가 되면 대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적 평화주의자의 대응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정국가를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Allen, 2014: 17-18).

성경적 토대에 대한 다른 해석도 제시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폭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비폭력의 승리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윤리적 모범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전론을 주창하는 기독교인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인간을 위한 윤리적인 모범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폭력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윤리적 해석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인간의 윤리적 범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한다. 또한 창조, 타락, 구원의 세계관에서 종말론적 승리로 현 세상의 인간이 행하는 악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악한 정권이 시작하는 전쟁에 대해 무저항하는 것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신원하, 2003: 142-144).

평화주의자들이 비폭력, 무저항의 성공적 사례로 예를 드는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경우도 예외적 사례라는 비판을 받는다. 평화주의자들은 이들이 평화적 방법을 통해 억압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간디가 대상으로 했던 자들은 영국의 식민통치자가 아닌 영국의 보통 유권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었고, 킹 목사는 미국 남부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다. 평화주의에 비판적인

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의 양심과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평화주의자들이 그리는 인간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모든 인간이 근본적인 변화를 단시간에 이룰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Regan, 2013: 6).

보다 일반적으로 평화주의는 삶의 권리에 기초하지만, 때로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력사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한다.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는 공격을 받았을 때 필요하면 살해할 수도 있다는 무력 사용의 의지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권리와 함께 해야 한다. 평화주의는 또한 “무임 승차”라는 비판도 받는다. 평화주의는 폭력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폭력을 사용하여 자기 방어를 하는 안보의 혜택을 받으면서 평화만을 외치므로 손을 더럽히지 않는 “기만적 믿음”을 줄 수 있다(Heywood, 2001: 270-271).

무엇보다도 평화주의는 현실성에서 항상 도전을 받는다. 평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쟁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국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평화주의자인 요더는 비폭력에 호소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가장 유명한 예인 2차 세계대전 직전 1938년 영국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시도한 유화정책인 뮌헨 조약이 결국 실패한 것은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이 폭력적 상대방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화주의는 먼저 선포하더라도 상대방의 호응이 없을 경우 작동하지 않으며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는 한계가 있다.

현실주의에 기반한 전쟁에 대한 관점은 기독교 전통이 강한 평화주의와 정전론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고전현실주의와 신고전현실주의 전제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무력의 사용을 보편적 규범 또는 현상, 달리 표현하면 “사물들의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Heywood, 2011: 265). 성경에 기초한 평화주의와 정전론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타락하였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다시 회복한 절대 진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쟁과 폭력을 자연적 질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이 가져오는 피해, 특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살상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전론의 전통을 현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으로 바꾼 전환점 역할을

수행한 니이버의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니이버는 인간이 예수님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으므로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없는 이상으로 간주하였다. 인간의 힘으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전쟁, 갈등, 다툼을 끊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 세계에 적실성이 없으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주장을 이상주의로 치부하는 문제가 있다(박도현, 2010: 99). 거듭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월츠로 대표되는 신현실주의는 가치 및 규범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고 객관화를 통한 과학을 추구하므로 국제정치학 태동의 목적인 전쟁 방지와 평화 도래라는 규범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주된 논의가 국제정치적 행위, 특히 전쟁과 같은 중요한 사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찾기 보다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맞추어 진다. 예를 들면 현실주의자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미국의 국익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Gvosdev, 2005; Mansfield and Snyder, 2005; Mearsheimer and Walt, 2003) 전쟁의 윤리·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였다.

신현실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핵심 개념인 국가의 이익과 권력 등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므로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생존이 최고의 국가 이익임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국가 이익은 역사, 국내 상황, 정치체제, 지도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쟁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창한 공산주의는 국내외 공산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무력 봉기가 필요하고(Marx and Engels, 2014), 레닌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을 전 세계 공산화의 과정 중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Lenin, 2011). 반면 자유 민주주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기반하여 발전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결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다(Doyle, 1986). 자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전쟁을 통한 가치 확산에 반대한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주창된 네오콘(Neoconservative)의 경우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군사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자유 민주주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다(Kegley and Blanton, 2015: 24). 따라서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에서 주창하는 국가 이익은 자유 민주주의 세계의 국가 이익과는 구분되고 전쟁

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국제체제의 구조와 강대국의 권력 배분을 핵심 변수로 상징하는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전쟁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부족으로 이를 억제할 구체적 행동 수칙 및 정책 제안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 IV. 정전론 재고찰

### 1. 정전론 원칙에 대한 비판

전술한 바와 같이 평화주의와 현실주의의 전쟁관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전론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원칙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정전론이 제시하는 전쟁 개시와 수행의 정당성은 사실상 국가가 준수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것이다(Sider, 2012: 166). 인류의 역사상 정전론이 제시한 전례를 따른 전쟁이 사실상 없다는 경험적 증거도 정전론 비판의 준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연합국의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영국은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독일 드레스덴에 집중 폭격을 가하여 1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Shapcott, 2011: 206). 관련하여 정전론이 제시하는 원칙들이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 전쟁 수행의 정당성에 활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전론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Allen, 2014: 38-39).

둘째, 정당한 이유로 전쟁이 시작되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전쟁행위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비판이다. 상대방은 수단의 비례성을 지키지 않고 민간인을 대량 살상하는 상황에서 아축 만 전쟁행위의 정당성을 지키면 전세를 역전시켜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정당성의 고려보다는 전세를 뒤집어 승리하는 실질적인 고려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Heywood, 2011: 268). 비슷한 맥락에서 비례성에 대한 정확한 준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무력의 결과가 어떠한 지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Allen, 2014: 32).

셋째, 현실주의자의 비판으로 전쟁은 정치행위이므로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 달성

이 완료되면 전쟁 행위가 중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당한 전쟁은 도덕과 윤리라는 모호한 관념과 열정으로 시작되어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Schmitt, 1996).

넷째, 전쟁 개시의 정당성과 전쟁 행위의 정당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혹은 둘 다를 모두 지켜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당한 원인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 국가는 정당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Heywood, 2011: 266). 대표적인 예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 사용한 핵공격이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자기 방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핵공격은 전쟁행위의 정당성 차원에서 수단의 비례성과 민간인 공격 배제 원칙 모두를 위배한 사례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이 결코 항복하지 않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전쟁 개시의 정당성이 전쟁 행위의 정당성보다 중시되는 사례이다. 이는 일반적인 도덕 이론의 한 유형인 행위의 목적의 정·부정을 따지기 보다는 결과의 선악 여부로 정당성을 결정하는 결과주의로 볼 수 있다(조현일, 2014: 26). 따라서 수단과 목표 비례성의 경우 자국 피해를 능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신원하, 2003: 140), 최소의 무력만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주장(Shapcott, 2011: 205)도 있다. 핵전쟁의 경우 전자의 원칙을 수용할 경우 핵으로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주장을 따를 경우 핵 보복은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핵전쟁은 전쟁이 악보다는 선으로 끝나야 하고 적군과 민간인에 대한 완전한 궤멸이 불가하다는 수단과 목표의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 핵전쟁이 시작될 경우 핵무기의 파괴력을 감안할 때 결국 양측의 궤멸을 포함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당한 전쟁론은 비슷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 간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對) 전체주의 국가 또는 테러집단과의 전쟁에 정당한 전쟁론이 적용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완전히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진 집단 사이에는 정당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 이슬람 국가(IS)가 자행하고 있는 성전(jihad)을 빙자한 테러를 정당한 전쟁의 원칙을 갖고 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슬람의 전쟁에 대한 해석의 다수는 전쟁을 제한하는 기독교 전통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을 순수하게 정화시키고 무슬림 세계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추방하는 지하드의 정당성을 주창

한다.

여섯째, 전쟁개시의 정당성 원칙 중 하나인 최후의 수단을 철저히 지킬 경우 무력 사용이 지연될 수 있고 그 결과 적의 무장이 더욱 강력해져 결국 전쟁이 발발할 경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30년대 나치 독일의 재무장과 공격 의지를 감안할 때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결과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는 비판이다(Heywood, 2011). 이는 적의 공격 의지가 분명하다면 선제공격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복잡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즉 예견된 공격에 대한 자기방어는 전쟁개시의 정당성 중 정당한 이유의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 자체는 “적의 위협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신성호, 2012: 248).

마지막으로 승리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도 논쟁이 되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 원칙 중 하나이다. 때로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적의 공격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을 개시하면서 정확하게 상대방과의 전쟁수행 능력 차이를 계산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Heywood, 2011; Walzer, 1997: 67).

## 2. 비판에 대한 반론

인류 역사상 정전론의 원칙을 완전히 지킨 사례는 없다는 비판은 결국 정전론의 무용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여 전쟁 개시와 전쟁 수행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현실주의의 주장처럼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주권 하에 세계 정부가 존재치 않은 상황에서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을 수용하게 된다. 그 결과 힘이 선이 되고 개별 국가는 끊임없는 군비 경쟁에 내몰리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음이 정당화한다. 정의와 윤리, 도덕의 개념을 통한 전쟁이나 폭력을 감소시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사례가 없다고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정전론의 기준을 보다 정교화, 구체화하여 이를 국제사회의 규범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지도자에 의한 정전론 원칙의 악의적인 활용 문제는 이것이 정전론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전론자가 원칙을 제시하는 목적은

전쟁에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고, 지도자들에게 전쟁 수행의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 그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실상 정전론의 원칙이 지도자들의 부당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보다는 그들의 부당성을 제시하는 데 보다 많이 활용된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부 독일군 장군들이 전쟁포로 처형과 같은 나치 지도부의 명령에 정전론의 원칙에 기반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 불복한 사례도 있다(Allen, 2014: 39). 20세기 들어 발생한 많은 전쟁에서 비록 정전론의 원칙이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정전론 원칙을 인용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전쟁 수행에 영향을 준 바 있다. 걸프전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자 미국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려는 여러 노력, 예를 들면 위험을 감수한 특수 부대에 의한 침투, 보다 정확한 정보에 의한 정밀 타격 등을 시도하였다.

비례성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보다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상의 삶에서도 개인은 끊임없이 일정한 행동에 대한 효과와 결과에 대해 예측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특정한 행동과 결정이 가져올 결과가 주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핀다. 같은 맥락에서 정당한 전쟁을 원한다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결과를 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례성을 무시하고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전쟁의 정당성은 상실될 것이다.

정전론이 도덕과 윤리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오히려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전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전론은 전쟁 개시와 수행에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쟁 개시의 정당성으로 침략에 대한 방어와 제3국의 방어를 제시하고, 전쟁의 목표도 이전 상태로의 회복 또는 평화 회복이라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부연하면 정전론이 제시하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침략전쟁에 대한 대응이 주류이다. 또한 자국의 국민뿐 아니라 적국의 민간인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정전론이므로 민간인 피해를 확대하는 확전에 대해서 지극히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수단과 목표의 비례성은 전쟁 개시와 전쟁 수행의 정당성 분야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 상대적 중요성을 따지기 보다는 두 분야 모두에서 지켜져야 한다(Christian, 2014: 211). 적국이 선제공격하여 전쟁이 시작되어 개시의 정당성을 갖더라도 평화의

회복을 위한 전쟁 수행 분야에서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쟁 개시가 정당하고 상대방이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민간인을 포함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더라도 전쟁 수행의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실상 전투가 시작되면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전론에 비판적인 견해는 비례성 원칙의 핵심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 배제, 즉 비전투원의 면책성이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원칙으로 현실 세계에서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월저가 설득력이 있는 반론을 제시한다. 월저는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는 최초의 의도가 민간인에 대한 직접 공격 의사가 없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민간인 피해를 가져온 전투 또는 전쟁이 행위자가 정당한 의도를 갖고 시도한 공격이었고,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수단과 목표의 비례성을 고려했다면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예상되는 비전투원의 피해를 자신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투기가 대공포의 위협을 무릎 쓰며 저공비행을 하는 것과 같이 민간인의 살상을 막기 위해 전투원의 위험이 배가되는 상황을 감수하는 경우 부수적 피해는 수용가능하다는 것이다(Walzer, 1997: 153-156). 핵전쟁의 경우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핵 선제공격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핵 보복을 시도하는 것은 자국의 피해에 대한 반격의 비례성 원칙에 적용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국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제시될 수 있는 방법은 핵무기 투하 대상 도시를 사전 경고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Merton, 2006: 215), 핵무기 대신 적의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활용하는 것이다(박원곤, 2015).

정당한 전쟁은 비슷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 국가사이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정전론이 범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정전론이 제시해 온 개념 틀은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어 서구 문명권만 아니라 타 문명권에서도 정당하고 올바른 전쟁에 대한 논의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조현일, 2014: 12). 공세적·팽창적 전체주의 국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집단이 세계정치에서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이들은 극단적 예외로 세계정치의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세력이다. 수단의 비례성을 쉽게 위반하여 민간인에 대한 대량살상도 불사하는 이들 세력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슬람권을 비롯하여 국제사회

는 이미 1899년 헤이그 협약을 통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 금지, 민간인 인질 금지, 전쟁포로에 대한 공정한 처우, 중립 지대의 인정, 외교관 불가침권 등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Christian, 2014: 212).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규범이 공유되지 않는 세력의 존재하므로 정당한 전쟁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들 불법 세력을 전쟁 수행의 정당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지에 모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부 이슬람 극단 세력에 의해 주창되고 있는 배교자와 비신자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Kiras, 2014: 368-370). 이미 제시된 정전론의 원칙이 확산되고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히 규범화된다면 정전론이 제시하는 원칙은 이들이 행사하는 폭력에 대항하는 정당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최후의 수단, 승리에 대한 합리적 전망 등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 국가가 이들 원칙을 수용할 경우 설사 이것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최대치의 효율을 저해하더라도 전쟁 자체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된다. 결국 정전론이 제시하는 원칙의 준수 여부는 현실주의가 주창하는 국익 추구를 위한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활용할 것인지, “전쟁의 개입을 제한하고 개입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과 작전들을” 제한할 것인지의 선택이 된다(월저, 2004: 48).

마지막으로 정전론의 비판과 한계는 건전한 정전론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 정전론 원칙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유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Fotion, 2000: 79-80). 여전히 기독교 전통에서 주장되는 원칙(US Catholic Bishops, 1986)과 권리 특히 국가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방식(Walzer, 1997)이 다를 수 있다. 해를 끼치지 않는 비악행과 다른 이들을 돕는 선행 사이의 중간 원칙 하에 정전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간 단계의 “직관적인 원칙”도 제기된다(Childress, 1986). 이외에도 계약 이론을 기반으로 하거나, 공리주의적 입장 하에서 정전론을 표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철학적, 인식론적, 신앙적 관점은 정전론의 원칙에 대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정전론의 근본 취지인 전쟁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는 정전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당화 유형의 주장이 정전론의 기치 하에 모인다면 이는 정전론의 유용성을 표상하는 것이고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 3. 정전론의 연구 과제

앞선 반론에도 불구하고 정전론은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정전론이 제시하는 전쟁 개시와 수행 정당성의 해석 문제, 현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정전론의 원칙 적용 등에서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분야는 보다 적극적으로 식별되어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정전론에서 주창하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 중 정당한 이유와 의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정전론자들은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선 정전론의 전쟁 개시 정당성에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부합되는 사례는 침략에 대한 정당 방어이다. 두 번째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의한 쿠웨이트 침공과 같이 강탈된 영토에 대한 회복을 돕기 위한 전쟁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주장은 독재자에 의한 자국민 대량살상과 같은 인도주의적 참사를 막기 위한 개입도 정당하다고 본다. 이미 유엔에서 자국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은 정당성을 넘어서 의무라고 규정한 “보호의 의무”(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가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모든 국가의 찬성으로 공포된 바 있다(Bellamy and Wheeler, 2014: 486-487).

그러나 인도주의적 개입의 문제는 개입의 주체, 수준, 정도 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인도주의적 참사에 국제사회가 무기력한 것도 정전론의 입장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나치 독일이 이미 유태인 학살을 시작한 1930년대에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전쟁 개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Allen, 2014: 28).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전론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더욱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정전론의 제시하는 정통성 있는 권위의 경우 현재까지 주권 국가를 기본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른 바 실패 국가(failed state)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권 국가의 권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와 같이 국민에 의해 선택된 국가가 아닌 권위주의적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주권은 국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Johnson, 2014). 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제 하에서는 상임 이사국 한 국

가만 반대표를 던지면 결국 인도주의적 개입이 불가능한 제도적 제약도 있다. 이러한 제약은 전쟁 개시의 정당성 기준 중 하나인 정통성 있는 권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향상시키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쟁 개시의 정당성 중 하나인 최후의 수단도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최후의 수단은 모든 비폭력적 노력이 실패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비폭력적 노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제시된다. 예를 들면 1991년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에 맞서 국제사회는 유엔의 결의안에 따라 연합군이 구성되어 전쟁을 통해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몰아냈다. 전쟁 개시의 정당성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이 부합되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 측면에서 사담 후세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협상 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제재의 기간을 좀 더 늘렸다면 전쟁 수행 없이도 후세인의 철수를 유도해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최후의 수단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어느 수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또한 경제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고통 받는 이라크의 보통 국민에 대한 문제도 제시한다(Allen, 2014: 30-31). 정당성 차원에서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침략국의 특성과 동기, 성향, 안보 환경 역동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 이전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쟁 승리의 가능성이 없으면 전쟁 개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합리적인 승리의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침략국에 대항한 자국 방어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에 가장 부합되지만, 침략국이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쟁 승리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영토가 강탈되고 나아가 무력에 의한 합병에 이르는 부당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군사력의 차이가 현격하여 승리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전쟁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지 아니면 자기 방어라는 전쟁 개시의 정당한 이유와 의도에 따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지 딜레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더불어 이른 바 독립을 위한 자유전사(freedom fighter)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Muller, 2008). 20세기 초 조선이 일본에 의해 합병되었을 때 조선인들은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를 상대로 독립을 위한 무력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정전론 차원에서 이를 판단하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 조선 독립의 주체 문제이다. 임시 정부가 중국에 설립되었지만,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단체에 머물렀다. 따라서 정전론이 제시하는 정통성 있는 권위에 문제가 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빼앗긴 국가를 되찾는다는 정당한 이유와 의도는 있지만, 승리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은 낮았다.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나아간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한반도 광복의 가능성은 요원했다. 또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공격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이었으므로 민간인 공격 배제라는 전쟁 수행의 정당성에도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도 안중근 의사를 테러주의자로 규정하는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안중근 의사는 영웅적인 독립투사이다. 현재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도 비슷한 논쟁이 제기된다. 이렇게 역사적 기원과 주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자유전사와 테러주의자 논쟁을 포함한 무력 분쟁에 대한 정전론의 입장도 제시되어야 한다.

정전론의 원칙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제시된 원칙은 불변이 아니라 시대를 거치면서 재평가되고 당시 상황에 보다 적실성 있게 변해왔다. 따라서 정전론과 관련된 선제공격, 예방전쟁, 봉쇄, 핵억제, 전쟁종결 등의 의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제가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특히 기독교 성찰에 따른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 주제는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대치 상황과도 밀접한 연계가 있다. 북한 핵 위협이 실제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발사 징후가 분명하다면 선제공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현재 한미가 운영하고 있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효용성과 정당성,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전쟁종결에 대한 정전론의 입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 V. 결론

정전론과 평화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 두 명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전론을 평가한 바 있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어느 특정한 전쟁에 대한 변론이 아니

며, 동시에 전쟁 그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도 아니다. 이는 지속적인 고찰과 내재적인 비판을 가능케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월저, 2004: 48). 정전론은 “평화주의를 제외하고 전쟁의 도덕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Yoder, 1972: 207).

정전론과 평화주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성찰로 시작되었고,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두 주장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알렌(Allen, 2014: 19-20)은 평화주의자, 특히 증언 주장과 정전론자의 주장은 양측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솔한 해석을 시도하므로 쉽게 어느 일방이 옳다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신학적 해석의 차이로 본다. 그러나 현 국제정치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군림하고 있는 신현실주의는 기독교 성찰을 기반으로 한 윤리·도덕적 고려를 무시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항상 상대적 이익을 확보하여 생존을 보장하고, 권력을 확장하며,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관점, 혹은 적어도 이를 기반으로 윤리·도덕적 고려를 포함한 정전론과 평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에 대항하여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노력이다.

특히 현실의 세계에서 인류가 경험하고 지금도 목격하고 있는 전쟁을 억제하고 제한하며 확전을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원칙을 제공하는 정전론에 보다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부연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접근하는 정전론은 결코 전쟁 자체를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을 정죄하며 비판하고 최대한 무력행사를 막아 궁극적으로는 전쟁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표이다. 평화주의의 입장에 대한 정전론의 핵심 문제 제기는 침략에 대한 방어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 사용을 반대하는 평화주의를 채택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수많은 침략전쟁에 대해서도 방어를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침략에 대항해서 싸우는 자기 방어의 정당성은 보편적인 규범이자 평화를 회복하는 행위이고, 침략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나 정전론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정전론이 제시하는 원칙과 규범에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는 설명과 반론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분야도 많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밝힌 것처럼 전쟁의 문제는 한반도 매일의 삶에 직면한 현실

의 문제이다. 한반도에 제한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재발을 방지하며, 확산을 억제하고, 전면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핵전쟁의 참사를 막는 것은 한국이 당면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이해, 대응책과 전략 마련 과정에서 아쉽게도 기독교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전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정전론이 제시하는 원칙과 규범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활용한다면 전쟁과 평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정치학자의 책무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박도현 (2010).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원근 (2015). “동북아 안보 환경과 평화: 기독교적 성찰과 방안의 모색.” 『제49회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연구원.
- 박정순 (2006). “마이클 월처의 정의전쟁론.”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 철학연구회 편.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손봉호 (2016). “비판적 정치참여.” 월드뷰.
- 신성호 (2012). “현대 세계안보질서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변환의 세계정치』. 하영신, 남궁곤 편. 서울: 을유문화사.
- 신원하 (2003). 『전쟁과 정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근욱 (2009). 『왈츠 이후』. 서울: 한울.
- 조동준 (2015). “전쟁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제49회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연구원.
- 조현일 (2014). 『젯빛 전쟁』. 서울: 집힘/펼침.
- Allen, J. (2014). *War: A Primer for Christian*. Texas A&M University Press.
- Barber, B. (2003). *Fear's Empire: War, Terrorism, and Democracy*. W.W. Norton & Company.
- Bainton, R. H. (1960). *Christian Attitude toward War and Peace*. New York: Abingdon.
- Bellamy, A. J. and Wheeler, N. J. (2014).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 in Baylis, J. et al (Eds.) (2014).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Childress, J. (1986). “Pacifism.”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Christian, R. (2014). “International Law.” in Baylis, J. et al (Eds.) (2014).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Clausewitz, K. von. ([1831] 1976). *O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oyle, M. W. (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1151-69.
- Dunne, Tim and Brian. C. S. (2014). “Realism.” in Baylis, J. et al (Eds.) (2014).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London: Penguin

Books.

- Fotion, N. (2000). “전쟁에 대한 세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 전쟁론.” in Bulls, V. (Ed.) (2000).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 김한식·박균열 역 (2004).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서울: 철학과 현실사.
- Gregg, R. (1966). *The Power of Nonviolence*. New York: Schocken Books.
- Gvosdev, N. (2005). “The Valuses(s) of Realism.” *The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5. 17-25.
- Hauerwas, S. (1985). *The Peaceful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Hauerwas, S. (1988). *Against the Nations*. New York: Harper and Row.
- Heywood, A. (2011). *Global Politics*. 김계동 역 (2014).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 Hobbes, T. (2013). *Leviathan*. Renaissance Books.
- Holmes, A. F. (2005). *War and Christian Ethic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Johnson, J. T. (2014). *Sovereignty: Mo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Geogretown University Press.
- Kegley, C. and Blanton, S. (2015).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Wadworth: Cengage Learning.
- Kiras, D. J. (2014). “Terrorism and globalization.” in Baylis, J. et al (Eds.) (2014).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Lenin, V. (2011).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Martino Fine Books.
- Long, E. (1968). *War and Conscience in America*. Philadelphia: Westminster, 1968.
- Merton, T. (2004). *Peace in The Post-Christian Era*. 조효제 역 (2006). 『머튼의 평화론』. 왜관: 분도출판사.
- Muller, J. (2008). “Us and them: The enduring power of ethnonationalism.” *Foreign Affairs*.
- Niebuhr, R. (2013).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Machiavelli, N. (1988). *The Pr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x, K. and Engels, F. (2014). *The Communist Manifesto*. International Publisher Co.
- Masfield, E. and Snyder, J. (2005). *Electing to Fight*. MA: MIT Press.

- Measheimer, J. and Walt, S. (2003). "An Unnecessary War." *Foreign Policy*. Jan/Feb. 50-58.
-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1985) "Nuclear strategy and the challenge of peace." in Kegley. C. W. and Wittkopf. E. R. (Eds.) (1985). *The Nuclear Reader: Strategy, Weapons,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 Patterson, E. (2007). *Just War Thinking*. MD: Lexington Books.
- Rathbun, B. (2012). "Politics and Paradigm Preferenc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6. 607-622.
- Ramsey, P. (1968). *The Just War*. New York: Scibner's.
- Regan, R. J. (2013). *Just War: Principles and Cases*.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Press.
- Schmitt, C. (1996).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pcott, R. (2011). "International Ethics." in Baylis, J., et el (2011).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Press.
- Sider, R. (2012). *Just Politics: A Guide for Christian Engagement*.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 Stevenson, W. (1987). *Christian Love and Just War*.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 Walzer, M. (1997).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NewYork: Basic Books.
- Waltz, K.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 \_\_\_\_\_ (2004). *Arguing About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Arguing About War*. 유흥림 외 역 (2009). 『전쟁과 정의』. 경기도: 인간사랑.
- \_\_\_\_\_ (2013). "The Origin of War in Neorealist Theory." in Betts, R. (Ed.). *Conflict after the Cold War*. Boston, MA: Pearson. 100-106.
- Yoder, J. (1971). *The Original Revolution: Essays on Christian Pacifism*. Scottsdale, PA: Herald Press.
- \_\_\_\_\_ (1972).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 \_\_\_\_\_ (1977).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Kansas: Faith and Life Press.
- New York Times* 2016. 2. 1. "Death Toll From War in Syria Now 470,000, Group Finds."
- 중앙일보 2016. 4. 23일자. "뉴욕간 북한 이수용 핵에는 핵으로 대응."

## Abstract

# A Study of Just War Tradition : Comparison with Pacifism and Realism

Won-Gon Park (Handong Global University)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s, there has been two traditions to examine the war - pacifism and just war. Both of traditions have same purposes in preventing war and bringing peace to the world. However, since they interpret the Bible differently, their suggestions to implement the peace in the world are different. On the other hand, neorealism - *de facto* dominating paradigm of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Politics - has totally ignored any kinds of moral or ethical consideration on war and regarded war as one of policy alternatives that nation's leader can choose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This article focuses on just war tradition because unlike pacifism which opposes any wars, it argues that a nation can exercise her self-defense against attacker, and even a way to restore peace and justice. Just war tradition has developed into two categories, justice of war and justice in war, both has articulated specific principles and standards to differentiate just and unjust wars.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over the just war principles and also there are several just war related contentious issues such as preemptive strike and preventive war. Nevertheless, if just war tradition has continued to develop and elaborate further, it can give valuable reference when making policy for peace.

Key Words: war, pacifism, just war tradition, neorealism, international politics